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23.(금)

□ 경남 기사

- ‘미신고 영유아’ 도내 8년간 122명 (경남신문)
 - 감사원 조사...전국 2236명 확인
- 이번엔 사기 혐의...창원 공무원 잇단 구설 (경남신문)
 - 대출 관련 고소장 접수 검찰 수사

홍 보 담 당 관 실

康南日報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004면 사회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 경호원 지원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민간 신변 경호원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 신고 건수가 684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이 사업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가 보호 대상이다. 보호 대상 피해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사흘간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는다.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 여청과 통보 >

康南日報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004면 사회

25t 탱크로리 타이어 ‘펑’...기름 유출

22일 오전 7시 3분께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하동 IC(나들목) 약 5km 전방에서 조경유 약 2만5천L를 신고 순천 방면으로 달리던 25t 탱크로리의 우측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이 사고로 타이어 파편이 탱크로리에 튀면서 조경유 약 40L가 도로에 쏟아졌다.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 운전자 40대 A씨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워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닥에 쏟아진 조경유를 모두 제거했다. 경찰은 탱크로리 타이어가 도로에 있던 불상의 물체를 밟아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윤관기자

< 교통과 통보 >

康南日報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004면 사회

창원서 40대 노동자 숨져

창원에서 40대 노동자가 2.5t 쇠파이프 묶음에 목이 짓눌려 병원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창원시성산구의 철강공장에서 2.5t 쇠파이프 묶음이 있는 작업대 밑에서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파이프 묶음에 목이 눌렸다. 직장 동료의 신고로 즉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1일 오후 숨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 경위가 나오는 대로 책임자 입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 형사과 통보 >

'미신고 영유아' 도내 8년간 122명

감사원 조사... 전국 2236명 확인

서울·경기 이어 네 번째로 많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서 2000여명에 이르고 경남에서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미신고 영유아 숫자는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명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23명을 표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알려졌다.

미신고 영유아 2236명 중 경남에서는 12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미신고 영유아는 광역지

출생신고영유아감사결과 6월 22일 현재

2015년~2022년(8년간) 신고출생아
총 261만 3000여명

지역별 미신고 영유아 1%

미신고 사례 영유아 2236명 중
23명(1%) 지자체 조사대상 선정

- 2015년생 베이비박스예 유기
- 수원, 2018·19년생 2명 살해·유기
- 화성, 2021년생 1명 유기 혐의(확인 중)
- 창원, 2022년생 생후 76일째 사망



자체 중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 다음으로 많았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는 한편 긴급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 여청과 통보 >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009면 사회

늑장 수사 논란 밀양 폭행사건 경찰조사 시동

고소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밀양시 내일동 폭행사건 조사 일정이 잡혔다.

▶ 21일 자 9면 보도

22일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병원에서 고소인과 만나 조사 일정을 잡았다”면서 “오는 27일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신고 이후 16일 만에, 고소장 접수 후

15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진다.

고소인 ㄱ(40)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40분께 밀양시 내일동 백민로 7길에서 밀양시 산하 문화단체 소속 ㄴ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고, ㄱ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12일 이후 사건 수사는 밀양경찰서로 넘겨졌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 형사와 통보 >



경남겨레하나가 22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다솜 기자

“평화 위협하는 군사협력·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한일협정 58주년 비판 목소리

한일협정 체결 58년을 맞아 지역 사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겨레하나는 22일 오전 창원 성산구 용호동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협력과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일협정을 맺었다. 경남겨레하나의 한일협정이 굴욕외교 시작을 알린 날이라고 지적했다. 한일협정으로 과거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정권 경남겨레하나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결탁으로 맺어진 한일협정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다솜 기자 all@

< 정보과 통보 >



마산중부경찰서, 금은방 범죄예방 활동 강화

마산중부경찰서(서장 서상태)는 최근 도내 귀금속 판매업소인 금은방에 강·절도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금은방 운영업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금은방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1인 운영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야간 시간대 지역안전순찰 또한 진행한다. 박준혁 기자

< 참고기사 >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014면 사람들

양산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양산경찰서가 해누리어린이집 3·4세 원생 12명과 함께 경찰서 견학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지난 21일 진행했다. 원생들은 통학버스 안전수칙 교육, 건널목 실물 모형을 활용한 보행 실습 등을 체험했다. /이현희 기자

< 참고기사 >

마약 소지 60대 긴급체포 부당 주장 기각

항소심 법원 “체포과정 적법”

징역 1년 6개월 1심 판결 유지

마약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고인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 김나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0)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ㄱ 씨는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유지됐다.

ㄱ 씨는 2018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 2021년 2월 6일 오전 11시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51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이뤄

졌다면 항소했다.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몇 번이나 알렸고, 소변 간이 시약검사 확인서와 채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ㄱ 씨가 긴급 체포 다음날(2021년 2월 7일) 피의자신문에서 “약 성분이 남아있어 정신이 온전치 않아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기각 이유가 됐다.

ㄱ 씨는 2021년 2월 3일 오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사는 ㄱ 씨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등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참고기사 >

경남신문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005면 사회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19명 진실규명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은 양산지역 주민 1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 검속돼 1950년 8월 양산 동면 사배고개 등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 19명은 당시 모두 20~30대 평범한 남성들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희생자들이 좌익세력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구금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1950년 8월 경남 지구 CIC(방첩대) 소속 군인 및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 추모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박준혁 기자

< 참고기사 >

생후 76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검찰, '아동학대치사' 징역 15년 구형

선고기일 연기... 내달 13일 공판

속보=수원에서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남에서는 출생신고 없이 출생 7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3월 20일 5면)

2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날 변론을 모두 마쳐 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A씨 측이 지난 19일 변호인을 교

체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리고, 선고는 그 이후 별도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B양이 분유를 토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 2.7kg보다도 적게 나갔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생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영진 기자

< 여청과 통보 >



남해경찰서 '보리암 실종' 수색 유공자 표창

남해경찰서가 지난 21일 서장실에서 최근 보리암 인근 실종 사고와 관련해 수색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남해경찰서 정광종 경사, 남해소방서 김완중 소방경과 김영진 소방사, 한려해상 국립공원 김용환·이호범 주임 등이다. /허귀용 기자

< 참고기사 >

도주 기간 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상태에서 아버지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자 도주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ㄱ(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ㄱ 씨는 2020년 5월 8일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숨지자 2020년 6월 30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도주했다.

ㄱ 씨는 도주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3월 대마와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투약했으며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도

주 기간에도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1시 20분 창원시 성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ㄱ 씨는 창원터널 입구에서 피해자 차량 때문에 차로 변경에 실패하자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다솜 기자 all@

< 참고기사 >

이번엔 사기 혐의... 창원 공무원 잇단 구설

대출 관련 고소장 접수 검찰 수사
성 비위 의혹 공무원도 직위해제
‘만취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지적
시, 간부공무원 220여명 특별교육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최근 직위해제 조치됐다. 앞서 시청 간부 공무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또 다른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각종 비위 혐의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창원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

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돼 19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대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에서는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됐으며,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간부 공무원인 B씨는 지난달 26일 이웃 주민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 15일에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C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일 밤 11시 50분께 창원 성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만취한 것으로 본다. C씨는 과거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경남도 인사위에 C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창원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잇따라 포착되자 지난 21일 간부 공무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 허가, 복무 일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해당 교육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을 주재한 하종목 제1부시장은 “공직사회의 신뢰구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민 기자

< 참고기사 >

“아동·노인 보행자 안전 관심을”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재욱 의원, 보행사망사고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조현신 의원, 도의료원 진주병원이 나아갈 길 제시
최동원 의원 “지역주택조합, 개선 안되면 폐지해야”



정재욱 의원



조현신 의원



최동원 의원

경남도가 12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보행자 안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정재욱 의원(진주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을 인용, 전국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1093명에서 2022년 933명으로 160명이 감소해 14.6%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남에서는 오히려 2명이 늘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 아동 보행자 사고 중 스쿨존 사고가 2020년 49건에서 2022년 55건으로 6건이나 증가했으며, 노인 보행자 사건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경남은 전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건 150건 중 노인 보행자 사건이 127건으로 84.6%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사고의 대다수인 120건이 중상사고이며, 특히 32곳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9곳이 전통시장 근처라고

밝혀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의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시행 중인 보행자안전바와 같은 차단식 횡단보도 안전시스템을 스쿨존이나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도에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협의해 아동과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위한 (가칭) 교통약자보행안전협의체 발족을 건의했다.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은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전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백화점식 진료과목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의료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진주병원은 특성화병원으로 가야한다”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수요가 적어 민간이 기피하는 소아·청소년 전문이든 특성화를 하지 않은 일반 병원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영은 이전 진주의료원의 전철

을 밟으라고 병원을 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처럼 부분이나 전체위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진주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원 의원(김해3·국민의힘)은 지역주택조합(약칭 지주택)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착공해 놓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택에 대한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른바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도 지주택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안 되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ews.co.kr

< 참고기사 >

합천 '먹튀' 호텔사업, 결정권자 면피 안 된다

기자수첩



김용구

메가시티사회부

raw720@kookje.co.kr

최근 인구 4만여 명인 경남 합천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용주면 영상테마파크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시행사 실사주 A씨가 250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고, 합천군은 지난 20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군은 앞으로 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과 하루 6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혈세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0년 군이 소유한 방 8개 규모 한옥 시설 임대 공모에 호텔을 새로 짓는 조항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여기에 더해 군은 당시 한옥 시설 운영권을 전 A씨 제안을 받아들여 호텔 객실 숫자도 200개로 늘렸다. 100억 원이 채 안 됐던 사업비는 590억 원까지 치솟았다. 2021년 12월 군의회 동의를 얻은 실시협약을 토대로 합천군은 55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자금조달계획을 승인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20일 시행사가 150억 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군은 추가 대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과다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250억 원이 시행사와 관련 업체에 지출된 뒤였다. 공정률은 고작 6%에 머물렀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

군, 거액 대출 혈세로 상환할 판 유사한 로봇랜드 실무자만 징계 철저한 수사... 관련자 엄벌해야

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마산로봇랜드 사태와 중첩된다. 민간사업자는 2020년 2월 로봇랜드재단이 펜션 용지 1개 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는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고 거액을 쟁겼다.

모두 실시협약이 민간사업자가 일명 '먹튀' 하기 쉽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영상테마파크 협약에는 사업 해지 때 군이 대출 원리금을 떠안는 독소 조항이 담겼다. 마산로봇랜드 협약에도 해지 귀책사유를 떠나 민간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집행부가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조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같다.

마산로봇랜드 사태는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에도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자초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감사를 거쳐 공무원과 재단 직원 등 34명을 무더기로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당시 정책결정권자였던 전임 도시사·시장은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번 영상테마파크 사태에서는 같은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전임 정책결정권자라도 필요하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가려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엄중하게 관련자를 처벌해 다시는 혈세가 사적 이익을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본보기 삼아야 한다.

< 참고기사 >

‘미신고 신생아 2236명’ 전수조사 확실하게

경기 수원에서 자신의 아기를 2명이나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 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2018년과 2019 년 병원에서 아기를 한 명씩 낳았는데 모두 출산 직후 죽었다 는 것이다. 경기 화성의 20대 여성도 아기를 낳아 제3자에게 넘겼는데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 다. 경남 창원에서는 영양 결핍으로 생후 76일만에 아기가 사 망했다. 이런 상황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안 된 2236명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중 1%인 23명을 추려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양육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폭행 또 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은 종종 봐왔다. 제 손으로 제 자

식을 들썩이나 죽여 그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엽기적인 행 각까지 접하고 보니 과연 인간인가 하는 탄식이 터진다. 불길 한 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예감 때문이다. 표본 조사가 아 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망 또는 유기 영아가 벌써 4명이다. 울 산에선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미 신고 영유아는 경기도 6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470명) 인 천(157명) 경남(122명) 순이다. 부산(94명)과 울산(24명) 도 적지 않다. 표본 조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사례를 전부 파헤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더욱이 병원 밖 출산인 경우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수원 화성 창원 등서 살해 유기 확인 병원 밖 아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

영유아나 아동 학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 긴 하지만 매년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게 문제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나 병원 예방접종 및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아이를 찾 아나서고 실제로 문제 사례를 적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후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현재 출 생신고는 부모만 하도록 돼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 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나 의료계 반대가 심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 록번호가 없는데도 감사원이 아 기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건 병원 에서 B형 간염 예방접종 시 부여 하는 임시신생아번호 덕분이었

다.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어디서든 나온다. 지금도 이미 세상 을 떠났거나 여전히 신음 중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은 감사원이 확보한 명단 속 아기에 대한 전수 확인이 시급하다. 복지부의 전수조사는 당연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출생통보제 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협조해야 한다. 공공 업무를 민 간에 떠넘긴다 할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서둘러 이를 뒷 받침해야 한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 생명까지 마음대로 빼앗 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자녀 학대 방임 살해에 대 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날씨

장마앞 30도 더위 지속

23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6월 23일 (음 5월 6일) 기상안내 131



| | | | | |
|-----|-----|----|-----|----|
| | | | | |
| 나들이 | 자외선 | 피부 | 냉 방 | 빨래 |
| 80 | 100 | 60 | 70 | 90 |

| | | |
|------|-----------|--------|
| | | |
| 맑음 | 맑은 후 구름많음 | 한때 비 |
| | | |
| 구름조금 | 구름많은 후 맑음 | 천둥번개 |
| | | |
| 구름많음 | 호리고 비 | 호리고 비눈 |
| | | |
| 흐림 | 소나기 | 호리고 눈 |

| | | | |
|--|----------------|--|----------------|
| | 해돋이/해짐 | | 달돋음/달짐 |
| | 05:10 19:42 | | 09:24 23:23 |

물때

| | 밀물 | 썰물 |
|----|-------------|-------------|
| 부산 | 11:08 23:33 | 05:01 17:19 |
| 인천 | 07:46 19:57 | 01:30 14:12 |
| 포항 | 17:34 - | 02:21 - |
| 통영 | 11:35 - | 05:43 17:44 |

바다날씨

| 앞바다 | 풍향 | 풍속 | 파고 |
|------|------|------|---------|
| 남해서부 | 서-북서 | 5~8 | 0.5~0.5 |
| 남해동부 | 서-북서 | 3~7 | 0.5~1 |
| 동해남부 | 북서-북 | 5~10 | 0.5~1.5 |
| 동해중부 | 북서-북 | 6~10 | 1~2 |
| 서해중부 | 북서-북 | 2~6 | 0.5~1 |
| 서해남부 | 서-북서 | 5~8 | 0.5~0.5 |

주간날씨

| | 24(土) | 25(日) | 26(月) |
|----|-------|-------|-------|
| 부산 | 20~27 | 20~26 | 22~25 |
| 울산 | 19~26 | 19~25 | 21~26 |
| 진주 | 18~30 | 19~27 | 21~27 |
| 김해 | 19~29 | 20~27 | 21~26 |
| 창원 | 19~28 | 20~26 | 21~26 |
| 통영 | 20~27 | 20~26 | 21~25 |
| 대구 | 20~30 | 20~28 | 21~28 |
| 세종 | 21~32 | 21~31 | 21~27 |
| 서울 | 22~31 | 22~31 | 22~28 |
| 제주 | 21~28 | 22~26 | 23~28 |